



정부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노력의 역할과 한계

한석수 |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

I. 들어가는 말

최근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라는 서울대 연구보고서¹⁾는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평준화 제도가 결국 고소득층의 서울대 진학률만 높여왔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학력세습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파장이 확산되었다. 그 동안 논의 과정을 통해 보고서상의 많은 부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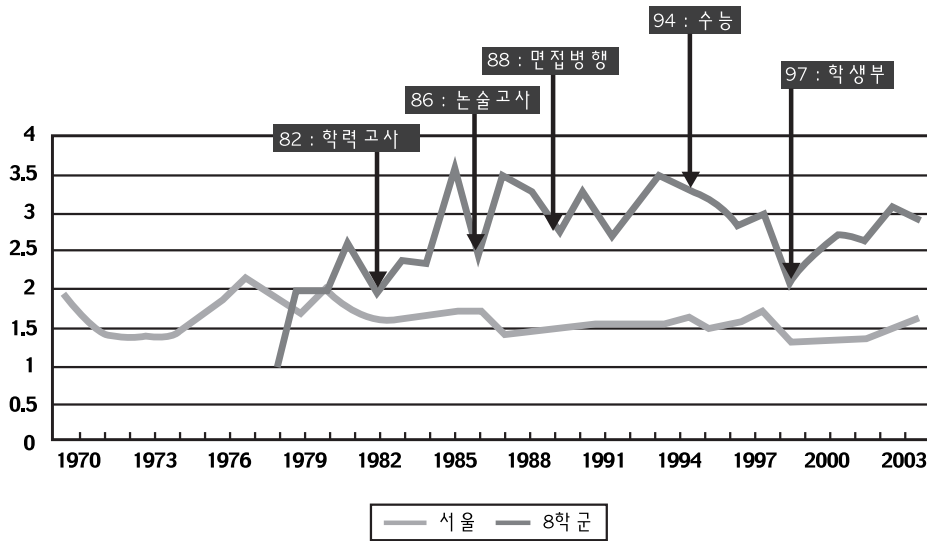
동 보고서는 연구 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 있는 근거없는 가설을 보고서의 표현대로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논의할 수 있을지 우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보고서가 갖는 사회적 비중과 인식,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그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감안,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더구나 통계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해석에 있어 더 깊은 주의를 요구하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보고서가 제시하는 내용과 자료를 중심으로 재해석이 필요한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학이 추구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평준화제도와 서울대의 입학비율

동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입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준화와 쉬운 시험문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1) 김광억 외 3인,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1).



(그림 1) 전국대비 서울지역 및 강남 8학군 서울대 입학비율⁵⁾

나 한편으로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1970년대에는 비평준화 환경 속에서 우수학생들이 서울지역의 명문고교에 몰리고, 이들이 대학별 입학고사를 통해 대거 서울대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입학생 가운데 서울지역 출신 입학생이 60%에 이를 정도로 서울지역 편중현상이 심하였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대학 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후로는 우수학생들이 지역내 고등학교로 분산되면서 서울출신 입학생 비중이 낮아졌다 (1982년 이후 서울출신 입학생의 비중은 40% 수준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평준화의 효과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라는 것이 정설이다. 콜먼 보고서²⁾와 하누셱의 연구결과³⁾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서울대의 계층간 혹은 지역간 입시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겠으며, 다른 요소들의 배

2) Coleman 보고서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는 미국내 3000개 학교, 50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의 균등화를 통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인데, 학업성취도에는 학교요인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만이 일관성있는 요인임을 확인함.
3) Hanushek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 1995)은 콜먼 이후 20년간의 동 분야 연구 187건을 종합 정리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하고 일관성있는 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결론 지음.

경에는 바로 이러한 SES가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경대학 2002 학생 실태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동경대학 입학생 중 사립중·고교 출신 비율은 15년전 37%에서 2002년에는 50%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고등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초래되는 불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겠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고교 평준화 제도와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의 노력은 나름대로 순기능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Ⅲ. 쉬운 수능출제가 부유층 학생들을 서울대에 많이 진학 하게 했는가?

보고서는 또한 '쉬운 입시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학력고사 이후 부유층 학생들의 입학비율이 높아진 것과 1994년 수능 이후 역시 높은 입학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1〕⁵⁾ 참조).

그러나 1982년 도입된 학력고사는 시험의 성격상 이전의 예비고사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과 1981년에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력고사보다는 졸업정원

제의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서울대는 졸업정원(5,020명)과 모집정원(6,530명)을 지정하여 선발하였으니, 이에 따라 실제 증원된 많은 부분을 서울지역 학생들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도 정원 증원 효과가 서울지역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수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수능이 도입된 1994년부터 대학별고사 역시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는 수능과 대학별고사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소위 쉬운 수능이 부유계층의 서울대 입학비율을 높였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능보다는 대학별고사 도입의 효과가 보다 강력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입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전형요소는 일반적으로 대학별고사라고 알려져 있다.〔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대학별고사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된 이후 서울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반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교육 때문에 정부의 전형제도 개선 노력은 1년 효과밖에 없는가?

보고서는 입시제도의 변경은 당해 연도에 부유층 학생의 입학비율을 낮추지만 제도 변경 1년만에 반등으로 이어져 입시제도의 변화가 항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쉽게

4)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2003. 12. 16).

5) 김광억 외 3인, 전계 보고서 p.78. 전국 평균과 비교한 전국 대비 서울지역 및 강남 8학군의 서울대 입학비율임.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서, 1982년 학력고사, 1986년 논술고사, 1988년 면접시험, 1994년 수능시험 및 1997년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후 강남 8학군 학생들의 입학비율이 당해 연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그림1) 참조).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듯이 이러한 주장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의 개입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졸업정원제가 운용되던 시기(1981~1988)에는 자료 분석에서 졸업정원제의 효과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켰다. 또한, 대입전형 시 대표적인 전형요소 중 하나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 1982년에는 내신성적 반영이 130점으로 전년보다 30점 증가했고, 1986년에는 다시 170점으로 늘어났다⁶⁾. 또한 1988년 면접이 도입되었지만 면접점수 반영은 단지 2%에 지나지 않았으며, 1994년 내신성적 반영비율은 전년도 30%에서 40%로 높아졌다. 1997년 학생부가 도입되고 대학별고사까지 폐지되어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내신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때 서울대 입학비율의 등락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변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신성적의 반영비중이 높아지면 서울 지역 수험생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시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학생들이 사교육을 활용하여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분석은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서울지역(부유층)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사교육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내신성적 반영을 제고시킴으로써 이를 다소나마 억제해 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신성적 반영비율 제고 효과가 특히 강남 8학군지역의 경우에 곧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서울대 지원을 기피하였을 강남 거주학생들 중 내신성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학생들의 서울대 지원이 점차 늘어났을 것이며,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조정(전학이나 특목고 학생들의 자퇴⁷⁾ 후 검정고시를 통한 지원 등)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수능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이 정부정책 효과 억제

동 보고서는 정부의 거시적 입시정책과 대학의 미시적 제도 운영 방안이 대학입학전형 제도에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대학별고사 금지나 수능시험제도 도입, 고교 평준화 및 졸업정원제,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등은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입시정책이라고 할 것

6) 1981년에는 예비고사 인문계, 자연계 각각 340점, 370점 만점, 고교 내신성적 100점 만점이었으나, 1982년부터 고교 내신성적은 130점 만점이 되었고, 1986년에는 학력고사 동 계열, 타 계열 각각 374점, 340점, 고교 내신성적 170점, 논술고사 20점 만점으로 전형하였음.

7) 서울대의 비교내신제 폐지에 따라 1998년부터 과학고 자퇴생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1998년 381명, 1999년 409명, 2000년 143명, 2001년 206명, 2002년 92명으로 변화해 왔음.

이다. 그러나 제시된 전형요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반영기준 및 방법,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결국 대학의 운용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7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도입과 본고사의 폐지로 서울지역 수험생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1980년대 이래 가장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서울지역 수험생의 입학비율은 2000년까지 최저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 이후 약간씩 증가 추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남 8학군지역 수험생의 입학비율은 1998년 이후 곧바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시기에는 수능체제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입시정책에 있어 그리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서울대의 전형방법은 학교장 추천제 및 특차모집 도입 등 비교적 변화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전형 방법들은 면접과 구술, 수능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서울대의 전형방법이 서울지역, 특히 강남 8학군 학생들에 유리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준화제도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 온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고 노력이 대학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을 때 서울지역(특히, 강남 8학군) 수험생의 서울대학 입학비율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Ⅵ. 대학별 전형방법이 변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최소한의 3가지 제한조건(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고등학교 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금지) 외에는 대학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험성적위주의 학생선발을 지양하고 대학별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특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최상위권 대학들은 손발을 묶어 놓은 자율화라면서 특히 본고사 및 고등학교 등급제를 허용하고, 몇몇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 도입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문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학생선발권은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빚어질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담보라는 교육적 기능은 물론 가치배분이라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자율권도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본고사 부활 등의 요구를 하면서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현행 틀 내에서 대학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선발방안을 구안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진정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사회계층간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문제를 고민한다면 평준화제도 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 전형방법의 특징은 수능시험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이 주를 이루어왔다는 것이

다. 미국 유명 대학들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종간, 지역간, 계층간 출신 학생들의 적정 비율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도 2002학년도에서야 비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학생 풀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그동안 서울지역이나 부유계층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2005학년도부터 정원의 20%를 학교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처음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학의 전형방법이 바뀌어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선,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50% 정도까지 확대하고 최소 자격기준도 현재 수능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완화한다면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능력 등이 문제가 된다면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입학정원의 10% 정도는 중도 탈락시키고, 필요하다면 편입학 제도를 통해 중간 수혈하는 학사관리체제로 전환한다면 학생의 풀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대학의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Ⅶ. 맺는 말

서울대 보고서는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계량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기한 사항

들은 상당 부분 해석에 있어 한계와 제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쉬운 수능과 평준화가 부유층 학생의 서울대 입학비율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대입전형제도 개선 노력이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도 아니다. 특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내신성적 반영비율 제고 노력은 서울대학교 진학자의 사회계층간 구성에도 바람직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은 최근 현재 수능중심의 대입전형을 2008학년도 이후 내신위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외에도 사회계층간 고등교육 기회균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이에 적극 동참해 주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학입학전형 정책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학입학전형제도가 고등학교와 대학은 물론 사회구성원을 위해 바람직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대학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석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Iowa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잠시 일하였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과학기술과, 대학학무과 및 장관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학술지원팀장 및 학술학사지원과장을 거쳐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이다.